

한국전쟁기 전사자 유해발굴의 의의와 전쟁사 연구의 과제

김성보 *

1. 머릿말¹⁾

한국의 역사상 '한국전쟁²⁾만큼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꾸준히 관심의 대상이 되어 온 사건은 드물다. 국내 학계는 물론 전 세계의 학자들이 전쟁 발발의 배경과 기원, 전개과정과 그 영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각도에서 한국전쟁사를 연구하여 왔다. 그간의 연구를 통해 한국전쟁은 일제강점기 이래 심화되어온 한국사회 내부의 정치·사회적 갈등을 거시적인 배경으로 하고 남북분단과 국제적 냉전의 조건 속에서 무력통일노선을 채택한 북한정권의 선제공격에 의해 발발하였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전 국토를 폐허로 만들고 3백여 만 명의 인명손실을 낳은 전쟁의 결과로 전 세계 차원에서 냉전구조가 심화·정착되고 남북분단구조가 고착되었음이 밝혀지고 있다. 또한 전쟁은 그 파괴적 속성으로 인해 전근대적인 유제(遺制)가 급속히 해체되고 근대적 사회구조가 만들어지는데 기여하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았음이 지적되고 있다.³⁾

한국전쟁은 단지 학술연구의 대상에 머물지 않는다. 매년 6월이 되면 정부 차원의 기념식으로부터 각 초등학교의 글짓기, 사생대회에 이르기까지 전 국가적으로 전쟁을 기념하는 행사들이 열린다. 전사자의 명복을 빌며 전쟁의 상처와 교훈을 되새기는 각종 행사들을 통해 전쟁의 '기억'은 전쟁을 겪은 세대로부터 그 이후의 세대에게 전달되며 국민 내부의 통합에 기여하고 있다.

* 충북대학교 사학과 교수

- 1) 이 글은 전사자 유해발굴에 헌신해온 박선주 교수의 요청과 박명림 교수 등 여러분의 귀중한 논평에 힘입어 작성되었다. 지면을 빌어 감사의 뜻을 표한다.
- 2) 1950~53년간에 한반도에서 벌어진 전쟁을 어떻게 명명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아직 국내 학계에서 합의된 바가 없다. 국제적으로는 'Korean War'로 통용되지만, 한국에서는 한국전쟁, 6·25사변, 6·25동란, 6·25전란, 6·25전쟁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며, ①남북전쟁, ②6·25남북전쟁이란 용어가 역사학계에서 사용되기도 한다(①金容燮, 1992. 『韓國近現代農業史研究』(서울: 一潮閣), 468; ②趙東杰, 1998. 『現代韓國史學史』(서울: 나남출판), 481). 필자 또한 분단 국가간 전쟁의 맥락에 초점을 맞추어 '남북전쟁'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바 있다(김성보, 2000. 『남북한 경제구조의 기원과 전개』(서울: 역사비평사)). 다만 이 논문에서는 편의상 현재 학계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는 '한국전쟁'이라는 용어를 잠정적으로 사용한다. 전쟁의 명칭에 대한 최근의 논의로는 김학준, 2000. 『6·25전쟁에 관한 몇 가지 예비적 토론』 『탈냉전시대 한국전쟁의 재조명』(서울: 백산서당) 참조.
- 3) 수많은 한국전쟁사 연구서 중 대표적인 업적을 선정하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다. 임의로 몇 편의 주요저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Cumings, Bruce, 1981·1990.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Vol. I·II(Princeton: Princeton Press) ; 박명림, 1996.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1·2권(서울: 나남출판) ; 김동춘, 2000. 『전쟁과 사회』(서울: 돌베개) ; 한국전쟁연구회 편, 2000. 『탈냉전시대 한국전쟁의 재조명』(서울: 백산서당)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편, 2001.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1』(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 윌리엄 스톡, 2001. 『한국전쟁의 국제사』(서울: 푸른역사).

한국전쟁은 이처럼 학술연구와 기념행사라고 하는 두 가지의 방식을 통해 끊임없이 재해석되고 집단적 기억으로서 재생산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한국전쟁에 대한 학계의 연구와 사회의 관심은 이제 충분하다고 할 정도가 되었는가? 유감스럽게도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 그 수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한국전쟁 시기에 한국군, 북한인민군, 중국인민지원군, 그리고 남북한의 민간인들이 얼마나 인적손실을 입었는지, 그 피해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한 통계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⁴⁾ 이는 전쟁피해의 문제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전쟁에 동원된 인적·물적자원의 규모와 동원체계, 각 전투의 구체적인 전개과정, 민·군의 전쟁체험과 생활·의식 변화 등 전쟁사 연구에 필수적인 기초 조사는 너무나 부족한 형편이다. 사회적으로도 한국전쟁에 대한 관심은 정부와 군·민의 대다수에게 어느새 그저 매년 6월 25일이 되면 기념식을 치루고 넘어가는 형식적인 기념 대상으로 퇴색하고 있다.

기초 연구의 부족과 기념의 형식화라는 현상에는 사실 하나의 공통적인 배경이 깔려 있다. 그것은 다름아니라 한국전쟁에 대한 과도한 정치적·이념적 해석과 기념 행위가 미친 부정적 측면이라는 점이다. 남북분단의 긴장감이 느슨해지고 소련·동구권 붕괴 이후 이념 자체에 대한 관심이 약해지면서 정치적 해석 위주의 한국전쟁 연구, 반공교육 일변도의 전쟁 기념행사는 일반인 다수의 관심을 강하게 끌지 못하고 있다. 한국전쟁에 대한 연구와 사회적 기념의 방향은 이제 새롭게 조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 전쟁 연구는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기초 조사를 바탕으로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재현하며 더 나아가 인간의 역사의 한 부분으로서 총체적으로 서술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전쟁에 대한 기념은 전쟁의 파괴성에 대한 자각과 '평화'의 소중함을 기리는 인류애의 보편적 방향으로 재조정될 필요성이 있다.⁵⁾

이 점에서 전쟁 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진행되는 육군 유해발굴단의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은 참으로 뜻깊다 아니할 수 없다. 전쟁 발발 반세기가 다 될 때까지 한국정부와 사회는 매년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는 행사를 하면서도 막상 전국의 산하에 흩어져있는 전사자의 유해를 발굴하는 사업은 실행한 적이 없다. 그것은 영령의 넋을 기리는 행사의 정치적 의미에만 관심을 두었지, 실제로 조국의 이름으로 산화했던 참전 군인 개개인의 존엄성에 대해서는 무관심했음을 반영한다. 만시지탄이지만 유해발굴사업의 진행은 참전 군인을 단순히 하나의 자원(資源)으로서가 아니라 국민의 일원으로서, 고귀한 한 인간으로서 인식할 만큼 한국 사회가 성숙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 같은 인식의 전환을 한국전쟁사 연구 전반으로까지 확대한다면 기존의 정치적·이념적 해석의 편중성에서 벗어나 군·민 모두를 포괄하는 인간 중심의 전쟁사 연구로 새롭게 지평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발표문에서는 유해발굴사업의 의미를 짚어보고 그 다음 한국전쟁사 연구의 영역과

4) 다만 국제연합군의 인적피해 수치는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되어있다. 그 수치가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각 국가가 자신들이 파견한 군대와 군인들에 대해 체계적인 조사를 해두었기 때문이다. 국제연합 참전 16개국의 인적피해(전사·사망, 부상, 실종, 포로)는 총 545,908명으로서 그 중 전사·사망자는 총 57,933명이다. 가장 많은 전사·사망자를 낸 국가는 미국으로서 54,246명이며, 그 외에 영국 1,078명, 터키 721명 등이다(國防軍史研究所 편, 1996. 『韓國戰爭被害統計集』(서울: 國防軍史研究所), 110).

5) 평화, 인권, 통일을 한국전쟁 연구의 가치기저로 설정하는 박명림의 문제제기가 참고된다. 박명림, 2002. 「통일 이후 한국전쟁 연구의 방향과 방법론」 『戰史』4.

시각에서 하나의 전환점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2.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의 의의

일반적으로 전쟁과 관련하여 유해발굴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과 같이 전사자의 넋을 기리고 유족을 위로하며 그로써 국민의 일원이었던 참전군인에 대한 국가로서의 책임을 이행하는 경우이다. 다른 하나는 전쟁과정에서의 학살 책임을 조사하고 진상을 규명하여 피학살자의 명예를 회복하며 전쟁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귀감으로 삼는 경우이다. 후자의 사례로는 캄보디아 내전 시기의 학살 사건(킬링 필드; The Killing Fields)을 발굴·조사한 경우가 대표적이며, 한국에서는 '제주4·3사건'·'보도연맹사건' 등의 민간인 피학살자 발굴·조사가 이에 해당한다.

한국은 세계자본주의 질서에 편입되는 19세기 후반 이래 자주적인 통일민족국가를 수립하지 못하고 식민지 피지배, 분단, 좌우대립, 전쟁, 냉전의 고통을 겪어왔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제 한국사회는 탈냉전의 시대에 들어서서 화해와 반성, 협력을 통해 남북간 평화질서를 구축하고 나아가 하나의 통일민족국가를 건설해야하는 과제를 짊어지고 있다. 그 과제를 한국사회 스스로 주도적으로 해결하려면 한국의 근현대사 속에서 발생하였던 대립과 희생의 상처를 차별 없이 포용해내야 한다. 피해자들이 군인이건 민간인이건, 소속과 계층·이념이 다를지언정 같은 민족의 일원으로서 포용하여 진상 조사, 유해 발굴, 명예 회복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희생당한 군·민 모두 보호되어야 할 국민의 일원이라고 할 때, 실종군인이건 민간인 피학살자이건 결국 정부가 직접 유해발굴사업에 나서야 하며, 이를 통해 군·민 모두의 상처를 아우르는 국민적 통합의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에서 실종군인 문제는 국방부와 육군이, 민간인 피학살자 문제는 민간 시민단체가 나서고 있을 뿐⁶⁾, 막상 국민통합의 구심점이며 국민 보호의 책임을 1차적으로 져야하는 행정부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막대한 비용과 노력이 필요한 실종자 유해발굴사업은 정부가 국민 개개인의 생명과 명예를 다른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 때 가능하다. 이는 국민의 생명 보존을 국가의 일차적인 존재 의의로 삼고 군인과 민간인 모두를 국민의 일원으로서 인식함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인식은 민(民)을 통치의 대상이 아닌 국가의 주체로 삼는 '국민국가'에서만 가능한 것이며, 그런 점에서 실종자 유해발굴사업은 그 자체가 그 국가의 근대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전 세계에서 실종군인 조사와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을 가장 체계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인들은 조국을 위해 전쟁터에 나간 군인은 고국으로 모두 안전하게 돌아와야 한다고 믿으며, 만약 외국에서 전사했으면 지구 끝까지라도 찾아가 유골 일부라도 가족 품에 안기게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만약 유골을 찾지 못하면 그의 유품 한 조각, 또는 마지막 순간의 흔적이라고 찾고자 한다. 이를 위해 미국 정부

6) 한국전쟁기의 민간인 학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범국민위원회', '민간인학살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등의 민간단체들이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다.

는 참전 지역에 상관 없이 전세계를 대상으로 미군포로나 실종자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이에 도움을 주는 사람에게는 적지 않은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7) 9·11 테러 이후 미국에서 불고있는 애국주의와 배타주의의 광풍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민주의(nationalism)의 강점(強點)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미국이 해외 전쟁에서 전사한 미군의 유해를 모국으로 송환한 것은 남북전쟁 이후 맥시칸전쟁(1846~1848년) 때가 그 시초라고 알려져 있다. 다만 그 당시에는 전사자나 실종자 신원파악이 정확하지 않았으며, 유해봉송도 제대로 되지 못하였다. 전사자 유해의 고국 송환이 제도화한 것은 1898년 미국-쿠바전쟁이 처음이다. 그 후 1917년 제1차 세계대전으로 미군이 유럽전선에 투입되면서 미군 유해가 미 본토로 대거 송환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전사자나 포로 및 실종자 관리의 중요성이 한층 높아져 미 의회는 관계 법령을 대대적으로 보완하였으며, 오늘날과 같은 신원확인소가 설립되었다. 이후 한국전쟁과 월남전쟁 등을 거치면서 신원확인소의 중요성이 높아져 1976년 5월 하와이주 호놀룰루 히카姆 공군기지 내에 DNA 감식반 등 첨단장비를 갖춘 미군중앙신원확인소(CILHI; The U.S. Army Central Identification Laboratory, Hawaii)가 설치되기에 이르렀다. 바로 이 신원확인소 건물 입구에 레이건 전 대통령의 유명한 어구, “우리는 당신들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다(Not to be forgotten)”가 새겨져 있다.8)

미군중앙신원확인소는 미국 전군인사사령부(US Total Army Personnel Command) 산하 ‘사상자 및 기념사업센터(Casualty and Memorial Affairs Operations Center)’의 현장사업단위이다. 이 기구는 명령·지원(Command and Support), 현장 조사·발굴단(Search and Recovery Operations), 사상자 자료 분석(Casualty Data Analysis), 법학 연구소(Forensic Laboratory) 등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약 170여 명의 군인 및 민간인 전문가들이 활동하고 있다. 그 가운데 현장 조사·발굴단에는 13개의 상설팀(standing teams)을 두고 전세계에서 미군 사망·실종자들의 관련지역을 조사, 발굴하고 있다(1999년 시점).9)

현재 미국정부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미군들의 유해 발굴작업과 실종 과정 등을 조사하고 있는데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실종된 총 7만 8천명, 베트남전에서의 2천명, 그리고 한국전쟁에서 실종된 미군들이 주 대상이다.10) 한국전쟁 당시 실종된 미군은 약 8천 1백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미국과 북한은 1996년부터 미군유해 발굴협상을 갖고 평남 개천, 평북 구장과 운산군 일대에서 북-미간 공동 유해발굴작업을 시작하였는데, 2002년 6월 현재까지 22차례에 걸쳐 실종미군으로 추정되는 유해 152구를 발굴하였다. 또한 지난 10월 22일에는 북한의 함경남도 장진(長津)호 인근 지역에서 미 육군 보병 제7사단 소속 장병들의 것으로 보이는 유해 11구를 발굴했다고 주한미군사령부가 발표

7) Jason Park, 2001. 「지구 끝까지라도 찾아 나선다」 『코리아 저널』 9월호 (<http://www.kjol.com/ed-08-09.htm>).

8) 위 글.

9) Todd Heussner · Thomas Holland, 1999(Summer). "Worldwide CILHI Mission to Bring Home Missing Heroes," *Quartermaster Professional Bulletin*(<http://www.qmmuseum.lee.army.mil/mortuary>).

10) Jason Park, 앞 글 참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미군중앙신원확인소 홈페이지 (<http://www.cilhi.army.mil/>)를 참고할 것.

한 바 있다.¹¹⁾ 한편 미육군유해발굴단은 베트남전 당시 백마부대 중대장으로 참전 중 사망한 박우식(朴愚植·당시 32세) 소령(추서)의 유해를 발굴하여 한국측에 전달해주기도 하였다.¹²⁾

미국과 달리 한국의 실종군인 유해발굴사업은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 국방부 산하에 실종군인 조사(포로 문제 포함)와 유해발굴사업을 전담하는 상설기구를 만들어야 하며, 이를 담당할 민·군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또한 1945년 분단 이래 1953년 전쟁이 종료하기까지 해방8년기에 발생하였던 민·군의 피해상황을 포괄적으로 조사하고 명예회복 조치를 취할 특별법과 한시적인 조사기구를 국무총리 산하에 둘 필요가 있다. 또한 발굴사업의 지역 범위를 남한은 물론 북한으로까지 확대하여야 하며, 향후 필요에 따라서는 해외로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에 대비하여야 한다.

1996년도에 국방군사연구소가 발간한 『한국전쟁피해통계집』에 의하면, 한국군 가운데 전사·사망자는 137,899명(육군 135,858명, 해군 1,903명, 공군 138명), 실종자는 19,392명이다. 15만 7천여 명의 한국군이 사망하거나 실종한 것이다.¹³⁾ 이들 중 유해를 찾아 국립현충원에 모신 영령은 2만8000여 명에 불과하며, 유해가 없이 이 곳에 위패만 봉안된 전사자가 약 9만 8000여 명이라고 한다. 육군은 유해를 찾지 못한 전사자의 수가 약 10만 3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편, 대한민국 민간인의 인명 피해도 심각하였다. 사망자 244,663명, 피학살자 128,936명, 행방불명자 303,212명, 피납치자 84,532명 등 부상자를 제외한 민간인 인명 피해가 761,343명에 달한다.¹⁴⁾

군인과 민간인 사망·실종자를 모두 포함한다면 실로 한국전쟁관련 유해발굴사업은 상상을 초월하는 비용과 노력을 요한다. 더욱이 전쟁 이후 반세기가 지났음을 고려할 때 완전한 유해발굴사업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나 유해발굴사업에 정부가 최선의 성의를 기울이는 모습을 보일 때, 정부는 비로소 국민국가에 걸맞는 위상과 역할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3. 연구과제 : 군인의 시각에서 본 전쟁사

매년 전사자의 넋을 기리면서도 막상 유해발굴사업이 전쟁 이후 반세기가 지나서야 시작된 데에는 군인을 고귀한 국민의 일원으로서보다 하나의 전쟁 자원으로만 파악하는 인권 경시의 풍조가 반영되어 있음을 앞서 언급하였다. 이러한 인식의 낙후성은 한국전쟁사 연구 자체에도 그대로 투영되어있다. 한국에서 상당수의 전쟁사(war history) 연구는 전투과정만을 나열하는 전투사(combat history)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전쟁의 정치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전쟁은 전투의 집합체이며, 정치의 연장(延長)이기도 하다. 그러나 여기서 놓쳐서 안 되는 점은 전쟁을 수행하는 담당자는 결국 군인이

11) 『동아일보』 2002.6.22; 2002.10.27(동아일보 기사검색에서 인용).

12) 고 박우식 소령은 대전국립묘지에 위패가 있는 베트남전 MIA(Missing In Action·작전 중 실종자) 두 사람 중 한 명이다(『동아일보』 2002.7.29).

13) 國防軍史研究所 편, 앞 책, 33.

14) 위 책, 85. 한편 사망, 실종(월남인 제외)으로 인한 북한측 인명손실은 인민군 52만 명, 민간인 48만 명으로 추정된다(이신철, 2001. 「전쟁 피해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의 변화」, 『역사문제연구』 6, 129).

며, 군인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것은 사병이라는 점이다. 전투의 지휘관으로서의 장군·장교, 전쟁을 둘러싼 정치의 맥락을 파악하는 것만으로는 전쟁의 전체 실상에 접근할 수 없다.

육군유해발굴단의 사업을 통해 우리는 전사한 군인들의 다양한 유품들을 접하게 된다. 이름이 새겨진 뿔 도장과 예수상, 천주교 기념메달, ‘중(中)’자 단추, 손거울 속에 들어있는 희미한 남녀의 증명사진, 지폐, 삼각자 등등.¹⁵⁾ 그러한 유품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것은 살인을 막기 위해 살인을 해야 하는 군인 이전의 인간 본연의 모습이다.

한국전쟁이 발생할 시점에 한국군은 보병 8개 사단과 2개 독립연대를 주축으로 한 9만 4천여 명의 육군과 5,700여 명의 해군, 1,200여 명의 해병대, 1,800여 명의 공군 등 총 병력이 약 10만 3천 명에 불과하였다. 3년간의 전쟁기간을 거치면서 한국의 육군은 3개 군단, 18개 사단을 포괄하게 되었고 병력도 55만여 명 수준으로 확대되었다. 해군은 1만 5천여 명, 해병대는 2만 5천여 명, 공군은 1만 3천여 명으로 늘어나는 등, 1953년 말에 한국군은 총 60만여 명으로 증강되었다. 한국군은 병력 규모를 증대시키는 한편 손실병력을 계속 보충해야 했다. 한국군 가운데 13만 8천명은 전사·사망하였고 1만 9천명은 실종되었으며, 45만 명은 부상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실제로 전쟁기간에 충원된 보충병력은 육군이 71만 8천여 명, 해군(해병 포함)이 3만 7천여 명, 그리고 공군이 1만 3천여 명으로 총 77만여 명이나 되었다.¹⁶⁾ 각 군별 및 연도별 보충병력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한국전쟁기 한국군 보충병력 통계

(단위: 명)

구 분	계	1950	1951	1952	1953
총 계	769,353	213,447	170,299	148,944	236,663
육 군	718,668	205,476	156,394	133,049	223,749
해군(해병 포함)	37,239	6,613	10,732	11,173	8,721
공 군	13,446	1,358	3,173	4,722	4,193

출전 : 國防軍史研究所 편, 1996. 『韓國戰爭被書統計集』(서울 : 國防軍史研究所), 33.

우리는 이들 군인들의 출신 배경, 생각과 정서, 군대 경험에 대하여 아는 바가 거의 없다. 단지 종이 위의 숫자로서만 알고 있을 뿐이다. 군의 출신 배경과 충원 과정, 훈련, 배치, 전투경험, 그들에 대한 처우, 제대 후 삶의 변화 등을 파악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전쟁의 담당자였던 군인들의 내면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 내면을 이해함으로써 전쟁의 성격, 전쟁이 미친 영향, 더 나아가 한국전쟁이 한국의 역사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온전히 해명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전쟁은 병력충원면에서 비정상적이었다. 한국은 전쟁 2개월도 안되어 전 국토의

15) 육군유해발굴단 편, 2001. 『6·25 전사자 유해발굴 보고서 — 2001년도 발굴 조사를 중심으로』(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참조.

16) 國防軍史研究所 편, 앞 책, 31~34.

대부분을 상실함은 물론, 그 지역에 있는 인력도 잃어버리는 이중적 손실을 당하였다. 따라서 정상적인 징집과 소집이 이루어지기는 처음부터 어려웠다. 비록 1950년 7월 제2 국민병 소집과 영호남지역에 편성관구사령부를 설치하였으나, 그 효과는 미지수였다. 그 결과 학도의용군과 소년지원병이 자원 참전하였고, 호국군이나 청년방위대 출신 장병, 학교 및 청년단 배속장교들이 현역에 편입되었으며, 비상시향토방위령(대통령령 제7호)에 의해 긴급 설치된 향토방위대가 향토방위 임무를 담당하였다.¹⁷⁾ 이 같은 병력충원의 임의성 속에서 군인 다수가 군사훈련의 부족, 군인의식의 미형성 상태에서 전투 현장에 투입되었을 것임을 예상하기 어렵지 않다. 군사훈련의 부족에 덧붙여 지원체계의 한계와 군 내부의 부정부패 등이 중첩되면서 한국군의 질적 수준은 저하되었으며, 국민방위군 사건 등 각종 비리가 야기되었다. 여기에 작전 지휘의 미숙함 등이 결합되면서 한국군은 과도한 병력 손실을 초래하였다. 이승만 정부는 전쟁과정에서 민간인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였지만, 군인들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국민이 국가의 보호를 기대하지 못할 때, 소속 집단이 해체되어 개인만 남게 될 때, 개개인은 오직 자신과 가족의 생존을 위해 발버둥치게 된다. 그 같은 개인주의, 가족주의는 역설적으로 경쟁을 최대화하여 사회경제발전의 동력이 되기도 하였다. 한국적 천민자본주의는 전쟁과정에서 민, 군 모두 국가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역사적 경험에 뿌리를 두고 있다.¹⁸⁾

한국 청년층의 군대 경험은 다른 한편으로 파편화되어있던 한 개인이 '국민'으로서의 의식을 갖추어가는 과정이기도 하였다. 군대 경험은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근대적 규율이 몸에 배는 학습 공간이었다. 전쟁과정과 전쟁 이후 준전시상태의 지속 속에서 한국 청년층의 군대 경험은 곧 '국민화' 과정이었으며, 그 국민화의 특징은 곧 한국현대사의 특징을 주조하는 것이었다.

전쟁 담당자인 군인 자신의 눈으로 본 전쟁사, 군인의 경험과 의식구조를 중심으로 한 전쟁사 연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각 부대별로 풍부한 역사기록이 축적되어야 한다. 각 소대, 중대, 대대별로 전투원들의 출신 배경, 의식 구조, 심리 상태, 전투원간 상호관계 등이 면밀하게 기록되어 있어야 이를 바탕으로 한 군인 중심의 전쟁사 서술이 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한국전쟁사 연구에 이 같은 방법론과 시각을 도입하기에는 자료상 한계가 뒤따른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예상 밖으로 한국전쟁에 관계된 비공개 1차 자료는 방대한 분량에 달하며, 증언채록 등의 방법을 보완한다면 그 연구가 불가능하지는 않다. 또한 유해발굴사업을 더욱 확대하여 유해들 주변에 남겨진 전쟁의 흔적들을 함께 발굴·조사하는 '전쟁고고학' 연구가 병행된다면, 우리는 당시 군인들이 겪었던 전쟁의 실상을 정교하게 복원해낼 수 있다.

연구방법론과 시각의 전환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한국전쟁의 실상, 전쟁을 담당하였던 군인들의 내면 속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잊혀져가는 과거사로서의 전쟁이 아니라 항상 새롭게 되새겨지는 전쟁의 경험으로서, 한국현대사 이해

17) 남정옥, 2001. 「국민방위군」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1』(서울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55~156.

18) 한국전쟁 과정에서 국민보호자로서의 국가의 책임 문제 및 그 영향에 대해서는 김동춘, 앞의 책, 제2장 참조.

의 열쇠로서 한국전쟁사를 연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4. 맺음말

육군유해발굴단과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유해발굴센터가 군·민 합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한국전쟁기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은 민간인뿐만 아니라 군인 개개인을 국민의 일원으로 존중하고 책임지는 국민국가로서의 책임성을 새삼 되새기게 하고 있다. 탈냉전, 화해와 협력의 시대에 들어선 지금, 한국 정부는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희생된 무수한 인명들과 그 유족에 대해 민·군을 막론하며 그 국적, 출신, 직업, 이념의 차이를 떠나서 그 상처를 보듬고 치유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 길만이 민족적 통합과 보편적 인권의 가치를 실현하는 길이다.

인권의 중요성, 국민국가의 책임성을 일깨워준 유해발굴사업은 향후 전쟁사 연구에도 새로운 과제를 제시해주고 있다. 전쟁을 다루어온 수많은 기존의 책과 글들은 종종 군인을 군사작전상의 하나의 소모품, 즉 '장기관 위의 돌' 정도로 취급하거나, 두려운 살인 무기로 묘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위대한 영웅으로만 묘사하는 경향이 있어왔다. 그러나 군복과 무기로 무장하였다고 해서, 전시(戰時)라는 비상한 상황에 직면한다고 해서, 군인 개개인이 지니고 있는 내면의 인간성 자체가 소멸하지는 않는다. 한국전쟁기에 '동족상잔'의 비극 속에서 희생되어간 군인들의 내면을 이해하고 그 군인들의 시각에서 다시 전쟁을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한국전쟁사 연구는 인간의 역사로서, 민족의 역사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전쟁사의 중심에 서지 못하였던 군인, 특히 군인의 대다수를 접하는 사병들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요청되는 것이다.

그와 더불어 유해발굴사업은 전쟁사 연구를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기초 조사부터 착실히 다져나가야 함을 일깨워주고 있다. 전쟁사 연구는 전쟁 자체에 대한 엄밀한 실증연구를 우선 진행한 다음 그를 바탕으로 전쟁의 정치적, 사회경제적, 역사적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 기본 순서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한국전쟁사 연구는 전자가 경시된 채 후자, 즉 해석 위주의 연구만이 주로 진행되어왔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한국전쟁이 지나간 과거로서 차분하고 객관적인 연구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지금까지도 남북한간, 그리고 대한민국 내부의 정치·사회적 대립의 연장선상에서 끊임없이 정치적으로 재해석되어야 하는 소재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적 재해석의 작업은 어쩌면 남북분단의 상황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한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만 전쟁이 발발한 후 이미 반세기가 지났고 전쟁을 야기했던 이념간·체제간 대립이 세계적으로 종식된 오늘날의 시점에, 그리고 대규모 선제공격을 한 쪽이 북한임이 확인된 현 시점에, 전쟁사 연구가 보다 심화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전쟁 전반에 대한 체계적이고 기초적인 사실 조사이다. 기초적이며 세밀한 조사가 축적되어야만 우리는 비로소 전쟁의 실체에 접근할 수 있게 되고 그를 바탕으로 전쟁을 생생한 역사로서 재구성할 수 있다.

전쟁과정 중심에서 인간 중심의 역사 서술로의 전환, 그리고 정치적 해석 중심에서 기초적인 사실 규명에 바탕을 둔 역사 서술로의 전환은 한국전쟁을 정치적·이념적 갈등의 영역을 넘어서서 전쟁 자체가 한국의 역사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 인간의 삶 속에

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을 던지는 작업으로의 전환이기도 하다.